
2010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정책심포지엄 종합토론

◆ 제1주제 : 국내 자살 실태와 문제점

○ 맹호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패널토론)

모든 정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살 원인에 관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놓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향후 자살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검을 통해 사망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가장 큰 질환이기 때문에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국가적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일본은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당해에 2,000억원 이상의 자살예방홍보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2006년 이후로 자살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1월 29일 국회의 노력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자살예방을 위한 기본적 체계를 갖추게 되어 자살률이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법률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사항을 언급하고,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도 일본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인 자살’입니다. 노인들이 사회적 기반을 잃어 자살에 이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노인 자살률 감소를 위해 체계적인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9번’ 상담전화를 통해 하루 5,000통 이상의 상담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 1/3 이상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한 자살을 호소하는 것으로,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시도 내 자살예방센터, 정신보건센터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계 종사자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료집에 게재된 WHO 권고기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순애 (대한보건협회 회원)

자살 예방을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향후 예산 집행 계획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한 학교·사회·가정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 맹호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하규섭 자살예방협회 회장께서 우리나라의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이 10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보다 조금 많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직접 지원되는 예산이 10억원으로, 협회의 홍보사업, 자살 상담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에 인건비 성격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만, 법률안이 제정되면 예산 증액 및 신사업 발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만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팀장)

맹호영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11월 29일 자살예방법률안이 보건복지소위를 통과하여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12월 8일 자살예방과 관련된 주제로 새로 제정된 법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의 여러 사례를 조사하고, 법안에 입각하여 행정부처에서 만든 자살 시도자에 대한 예방 관리 프로그램 등 각 사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주제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연령별 자살 통계 중 60대 이후 노인 자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보도와 노인 자살의 상관관계에 대한 저희 부처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노인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제2주제에서 논의하겠지만, 과연 언론보도의 개선이 노인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규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

언론보도가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은 향후 조사가 필요한 부문일 것입니다. 언론보도가 노인 자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언론의 자살보도로 인해 자살이 우리 사회의 한 문화로 정착하게 되어, 사회 전반적으로 자살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또한 자살은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한 것으로, 많은 자살자들이 삶의 희망이 있다면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정구역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노인 자살은 농약 음독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농약 제조회사가 협조하여 농약을 혼자만의 힘으로는 개봉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나 사회적 인식 전환이 이뤄지지 않아 기대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에서 가정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신체적 질병에 치우쳐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무심한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2011년이면 우리나라의 80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만명이 됩니다. 노인들이 여러 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삶의 희망이 있다면 자살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눔과 사랑, 배려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는 언론보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를 통해 자살 위기에 몰린 사람들에게 구제수단을 안내해줄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자살 바이러스가 아닌 행복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최종혁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장)

저희 병원도 자살예방에 관심을 갖고 자살예방연구과를 신설하여 대책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할 10~30대의 사망원인 중 1위가 자살률이라는 통계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청장년층의 자살률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둡기 때문에,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생명 존중에 대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신과적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자살원인 중 30%가 정신질환과 관계있다는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신과 치료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이 바로잡혀야 합니다.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정신질환 및 자살 시도 사실에 대해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되어 정신질환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 성공 사례를 당당히 밝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 제2주제 : 자살보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이동구 (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실 차장)

언론계가 자살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정탁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는 자살보도에 대해 당사자 및 유가족의 문제제기가 없는 한 피해를 구제할 만한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디어의 효과 중 ‘환각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폭력물에 많이 노출된 어린이는 실제 폭력사건 발생수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한 것처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실험결과로 미루어 볼 때 자살보도가 많아지면 자살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질 것이며, 자살을 미화하는 보도는 사회적으로 자살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사는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보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자살사건이 과연 소구력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 기사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매체가 보도했다고 하여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인권을 존중하여 공익적 가치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박효순 차장님의 주장 중 자살사건에 대한 공식브리핑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고, ‘자살보도가 자살률을 낮춘다’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박효순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자살사건에 대해 진실게임 형식으로 보도한다면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살은 사회적 질병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여 국가에서도 취재를 적극 지원해주고 언론에서도 관련 캠페인을 벌인다면 자살률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제가 2006년에 한국자살예방협회와 공동으로 캠페인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는데, 주제가 무거워 지면을 할애받기도 어려웠습니다.

또한 자살 통계에 대해 보건복지부나 협회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 공식 자료를 발표한다면 정확한 실태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충헌 (KBS 의학전문기자)

2004년에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자살보도기준을 제정했는데, ‘자살 사건은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첫 번째 조항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같은 보도준칙은 언론인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실정으로,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임경록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전 연합뉴스 상무이사)

유명인이 자살하면 보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와 주간지를 제외한 책임있는 언론사는 일반 개인의 자살사건은 보도하지 않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을 경우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와 한국자살예방협회가 공동으로 언론사 데스크를 상대로 자살보도준칙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식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장)

자살률 감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공기인 언론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중재법이나 신문법 관련 조항을 통해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나, 언론사가 보도준칙 또는 심의기준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원회나 정부 등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맹호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자살률 감소는 사회적 합의 사항입니다. 언론으로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살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이 자살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신중하게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언론이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진실 씨의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살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언론도 자살예방을 위해 우리 사회에 생명사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 **하규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

핀란드는 자살예방에 가장 성공한 국가로 꼽히는데, 자살사건 보도 시 ‘○○가 사망했다’고만 간단하게 보도한다고 합니다. 자살사건보도가 자살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향후 보도 시 주의를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실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협회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언론이 자살예방을 위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을 신설할 계획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04년 한국자살예방협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성 차원에서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에 자살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1건이던 것이, 2010년 10월말 현재에는 155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 수치가 오늘날의 문제점을 웅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박효순 (경향신문 사회부 차장)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홍보할 만한 정책이나 시스템이 있다면 언론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도 무분별한 취재경쟁은 지양하되, 관계 기관과 협동으로 연중 캠페인을 펼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오늘 심포지엄에서 발제와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언론중재위원회도 오늘 해주신 여러 말씀들을 참고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일선 기자들을 대상으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예방 및 조정중재제도에 대해 교육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살보도기준에 대한 교육 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산의 한계로 인해 홍보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2005년 위원회의 ‘시정권고’제도를 폐지하려는 언론계의 입법 노력도 있었습지만, 자살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 제도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디 언론계에서는 시정권고에 대한 기피의식을 버리고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정권고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강제성을 부여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는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할 사안입니다. 다만 시정권고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입법 조치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족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근접 촬영하는 것은 인간의 품위와 관련있는 것으로 언론의 책임있는 보도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겠으나, 유족이 인격권이나 명예감정 등을 이유로 조정중재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심리하여 손해배상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언론을 위축하거나 언론사를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정중재제도의 실효성을 강구하고 언론의 품위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오늘 심포지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